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

---

#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

---

2023. 6. 26.

## 목 차

### 투자 활성화 촉진

1.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 1
2.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 2
3.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 4
4.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6
5.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 7
6.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 9
7. 면세 식료품 매입세액공제 개선 건의 ..... 10
8.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조속 입법 및 지역 중견기업 육성 지원 .. 11

###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9. 상속세율 인하 ..... 13
10. 기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14
11.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16
12.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17
13.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18

## 목 차

### 노동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	19
15.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21
16.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	22
17.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	23
18.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24
1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25

### 지속가능경영 지원

2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	26
21.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규제 완화 .....	28
22.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29
23.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	30
24.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32
2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33

##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일화 추세
  -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
    - \* 최고세율('11년→'21년, 지방세 포함) : OECD 평균 25.4% → 23.2%, G7평균 32.8% → 26.7%, 한국 24.2% → 27.5%(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조세수첩)
  - 법인세 과세 시 OECD 35개국이 단일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2개, 룩셈부르크 3개 구간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만 4개 구간 적용
- 한국은 '18년부터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25%)하고 '23년부터 24%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역행
  - \*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구간별 1%씩 인하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 2020년 기준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7%에 비해 한국은 3.4%로 높은 수준
  - \*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 2.3%, 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 법인세 부담 증가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자본 유출을 초래
  - \* 해외직접투자(기재부) : '17년 450.2억 달러 → '21년 758.7억 달러(308.5억 달러 증가)
-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독려 필요

## □ 건의내용

-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 인하
  -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0%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0~2%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수준('20년)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1%\*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 : 한국 79.1%, 미국 73.9%, 일본 79.2%, 독일 68.9%, 프랑스 65.8%, 영국 66.6%, 중국 76.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평균 신규 채용 추이 : ('16년) 23.2조원/56.8명 → ('18년) 24.2조원/40.4명 → ('20년) 19.0조원/46.2명 → ('22년 계획) 14.5조원/34.4명(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78,171	81,106

\* 중견기업 기본통계

- 그러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차 15% → 중견 4~5년차 10% → 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18.0%)보다 높은 수준

\* 회귀 검토요인 : 조세지원 축소 58.0%, 금융지원 축소 15.4%, 판로 제한 14.8% 順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 건의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1안)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전체 기업 25%

- (2안) 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중견기업 범위 : (現)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案) 2조원 미만

\*\* 공제율 : (現) 중소 25%, 중견 8~15%, 대 2% → (案)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 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1%)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2개사(7.9%)(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원	11.1%	249억원	4.4%	4,751억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원	72.4%	2,228억원	8.1%	5,377억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 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4

## R&amp;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2배 한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50, 중견40, 그 외 25	10(12)	5(7)	1(3)	3(1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코스닥)	20~30	-	12(18)	6(10)	3(6)	3(1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25	15	15	4(10)
중견 적용범위	3년 평균 매출액 <u>5천억원 미만</u>				3년 평균 매출액 <u>3천억원 미만</u>			

\*    ( )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23년 1년간 한시 적용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

## □ 건의내용

- R&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99년 지주회사제도 허용 이후 정부는 기업구조 조정 원활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지주회사 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해 옴
  -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세제 혜택이 지배주주에게만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제도를 '21년 말 폐지할 예정이었으며 코로나19로 '23년 말까지 한시적 연장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23년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24년부터 '26년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일로부터 4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
- 과세특례 폐지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책 비일관성 초래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할 우려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회사는 행위제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함
    -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 자회사 주주는 지주회사에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자회사 주주가 보유 중이던 자회사 주식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문제 발생
  -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지주회사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자금 부담이 증가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할 것

- 중견기업은 경영안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고물가·고금리·글로벌 긴축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미루거나 중단

사례	
	반도체 제조 A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으로 자본확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차입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재무건정성 문제가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증가. 최근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건의내용

- 지배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과세특례 일몰 기간 추가 연장

## □ 현황 및 문제점

- 사모펀드 제도 개편('21.10월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완화되었으나 투자자 요건은 강화됨

\*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4항~제5항)

-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비상장회사도 PEF에 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비상장회사는 투자자로 참여 불가능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법인 5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최근 1년 이상 계속 50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월말 평잔 기준) 보유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투자자 자격 제한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M&A나 전략적 투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

\* 대형 M&A 상위 20건 기관전용 사모펀드 참여 비중 : '19년 65% → '20년 80% → '21년 85%(금감원)

- 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자 요건\*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 규제에 해당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限)

##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물가안정을 위해 '22.7월부터 '23년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해당 식료품 생산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 과세가 면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통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불공제금액이 급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상 부담 가중
- \* 공통매입세액 :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필요
- \*\*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사례

장류전문기업 B사는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22년(7.1~12.31) 50억원, '23년 106억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면세 이전 5% 이상이던 영업 이익률이 면세 이후('22년 하반기부터) -0.4%로 적자로 전환(약 8억원)하였으며 '23년 적자 규모는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물가안정을 위한 면세 취지는 공감하나 면세 식료품 생산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 마련 필요

## □ 건의내용

- 면세 미가공 식료품\* 생산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금액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계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수단 마련 중(국정과제 115)
-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회 계류 중
  - \* 주요 내용 : ▲기회발전특구 신설 및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등 패키지 지원, ▲지방기업/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차등 적용, ▲지방 투자기업 인력수급 애로 해소(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방대학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육성 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을 비롯한 노동력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구직난이, 지방에서는 구인난이 발생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 '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49.3%, 전체 종사자의 52.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수도권 사업체 / 종사자 비율(%) : ('15년) 48.4% / 51.7% → ('20년) 49.3% / 52.3%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22.6.28)
-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역 고용 및 소비 촉진, 생산 유발, 인구 유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도가 높음
- 세수 측면에서도 지자체는 법인지방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지방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중견기업은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폭넓은 거래관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

\* 중견기업의 59.0%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원사업자는 47.1% 1차 협력사는 46.9% ('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방투자기업 및 지역 중견기업을 육성·지원할 정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 건의내용

-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 구직자의 지방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을 유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 마련
  -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기업을 위한 과감한 인력지원 정책 추진(예 :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력고용허가제 예외 적용 등)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혜택 소급 적용

\* 예 : 투자금액이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사 이전 기업 등

- 지역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부지원책 마련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19~'23)"이 종료될 예정이나, 후속사업 부재. 기존 사업 성과를 연장·확장시킬 수 있는 후속 사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1년 상속세수는 6조 9,447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원(%)) : ('11) 12,586(0.7) → ('16) 19,949(0.9) → ('21) 69,447(1.9)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li> <li>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li> <li>*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li> <li>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li> <li>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li> <li>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li> </ul>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 건의내용

-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lt;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gt;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096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1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및 공제한도(최대 6백억 원 → 최대 1천억 원)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랜 기간 가업을 영위해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음에도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져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광업 (05~08)	제조업 (10~33)	건설업 (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전체	전체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등 5개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사례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나 주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 다른 분류코드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함

##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 현황 및 문제점

-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600억원 한도\*로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액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애로

상속세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증여세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중견기업은 과세특례 한도 확대에도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우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이로 인한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예시> 1천억 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 증여세 부담 세액 : 307.4억 원

\* 특례한도(600억원) 세액 : 6억 원(60억 원 이하 10%) + 106억 원(60억 원 초과분 20%)  
특례 한도 초과분(400억 원) 세액: 195.4억 원(10~50% 누진세율)

• 5년간 연부연납 시 매년 61.5억 원 납부(거치기간 없음)

\*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

## □ 건의내용

- 안정적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동일한 수준(최대 20년)으로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 중견기업(83.1%)\*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

\* 중견기업 현황('21년 결산기준) : **비상장 4,555개(83.1%)**, 코스피 453개(8.3%), 코스닥 467개(8.5%), 코넥스 5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매년 노조 파업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등으로 근로 손실과 생산 차질로 인해 기업의 피해 증가

&lt;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gt;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노사분규건수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근로손실일수(천일)	638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471	343

\* 출처 : e-나라지표

-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분야는 141개 국가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 (WEF, 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19.10월)

- 외투법인은 국내투자 애로요인\*으로 노사관계를 1순위로 응답

\* 노사관계 34.8%, 경영환경 24.6%, 임금수준 24.6%, 정부규제 21.7%, 정치적 안정성 13% 順 (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19.10월)

- 게다가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이 '2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더욱 심화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 해고자·실업자까지 노조활동이 가능해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장 불법 점거 등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 우려

-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대해 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방어권 보장

<주요국의 노조 단결권에 대한 방어권 비교>

구 분	주요 내용
미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근로조건 향상 위한 파업시 영구 대체 가능)
독 일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일부 허용(파업불참자·도급 등)
프랑스	직장점거 원칙 금지(예외 허용), 대체근로 가능(파견·기간제 근로자 대체 금지)
영 국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허용(파견 제외)
일 본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영구 대체 불가)
한 국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 □ 건의내용

-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조성을 위해 노사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및 직장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
  -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금지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명문화

## □ 현황 및 문제점

- 주52시간제 시행 후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도입요건이 까다로우며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경영 부담 가중

\*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연구개발업무)),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재해·재난→돌발수습·업무량 폭증 등 추가) 및 기간 확대(연 90일), 사업장 단위 인가

- 또한 직무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 발생
  - 계절적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
  - 다품목·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나 획일적 규제로 R&D·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되어 경쟁력 약화
-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 건의내용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1년),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연구개발업무 3개월)→6개월) 및 도입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합의)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개선(사업장 → 근로자)



##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으로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에 막대한 부담 가중
  - \*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생책임 5배,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벌금부과(사망 50억원 이하, 상해 10억원 이하)) 등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기업경영 공백을 야기하고 생산·투자 차질 유발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온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킴
  - \* 사망사고 시 처벌 수위 : 【영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 【독일】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5천 유로(약 6,100만 원) 벌금, 【미국】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불(약 1,100만 원) 이하 벌금, 【일본】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만엔(약 1천만 원) 이하 벌금(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21.12월)

## □ 건의내용

-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산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계류 중

\* 주요내용 :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배상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 노조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 또는 장기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초래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업체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권 침해 우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권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조의 무분별한 쟁의 발생 우려
- (손해배상책임 제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별 책임 범위 입증에 사실상 불가능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그 피해는 사용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 훼손, 국내 투자 기피 및 해외 이전, 국내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우려

## □ 건의내용

-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23.12.31까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 중소→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3%\*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372만원(중견연,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 중견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2순위 :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6.4%),  
중견기업 근로자 이직 원인 1순위 : 낮은 임금수준(18.1%)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 기업규모별 제조기업 비중(통계청 '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통계) : 중소 20.1% 중견 38.5% 대 20.7%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 건의내용

-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기업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
  - \* 중견기업 제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 적합한 인재부재(44.8%), 지방소재(19.9%),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5.5%) 순으로 조사(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특히, 뿌리산업은 주력산업의 원천기술로 활용됨에도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렵고 직원의 고령화로 기술단절 우려
  - \* 뿌리기업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1년 결산 기준 제조업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 기업은 1,004개사이며, 뿌리기업(수도권 포함)은 328개사)

### □ 건의내용

- 지방 소재기업 및 뿌리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외감법 개정, '17.10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사인을 6년 간 자유 선임 후 3년 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19년 220개사에서 '22년 677개사로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전체	상장기업	유가증권	코스닥	비상장기업
2019	220	220	134	86	-
2020	462	434	163	271	28
2021	674	593	265	328	81
2022	677	531	219	312	146

\* 자료 : 금융감독원

-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부담 가중
  - 신외감법 전·후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17년 1.01억원에서 '21년 2.56억원으로 약 155%, 감사시간은 1,416시간에서 2,531시간으로 79% 증가
- \* 감사보수(백만원) : '17년 100.7 → '18년 118.8 → '19년 146.0 → '20년 197.2 → '21년 256.4  
 감사시간(시간) : '17년 1,416 → '18년 1,602 → '19년 1,796 → '20년 2,113 → '21년 2,531
- 금융감독원의 감사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19년~'20년 11.5건에서 '21년 13.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일부 역량이 부족한 회계법인은 책임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 가중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음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주체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없음	존재 (10~20년)	없음	없음	없음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없음				있음

\*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1.10월

## □ 건의내용

-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예 : 6년간 자유 선임 후 3년간 외부감사인 교체

##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목으로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을 요건\*\* 강화

\* 자산총액 기준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16.9월)

\*\*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을 상장 20%→30%, 비상장 40%→50% 상향('20.12월)

- 지주회사 설립 및 지분을 요건은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작용해 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함
  - 지주회사 설립요건인 자산기준 강화 이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수는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수는 감소

<일반지주회사 현황>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일반지주회사	92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158
대기업집단	26	28	30	30	29	19	39	34	37	41	44	47
중견·중소	56	75	84	87	111	133	144	130	126	116	110	111

\*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함

-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그간의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어 정책 일관성 결여
  -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04년) 손자회사 허용, ('07년) 부채비율 완화(100%→200%), 증손회사 보유 허용, 자·손자·증손회사 간 사업 관련성 규제 폐지
-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사전적 규제는 없고 시장독점 등 사후적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02년에 사전규제 폐지

## □ 건의내용

-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을 완화하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을 하향(상장 30%→20% 비상장 50%→40%)

###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법으로 규정
-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유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 한계
- \* (사례) 비산재 등 산업부산물을 탄소포집활용(CCU) 기술로 처리하여 생산한 탄산화물 등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 어려움

### □ 건의내용

-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 중

### 순환자원 인정기준(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안), '17.12월)

###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 실제로 순환자원 인정건수(465건) 중 왕겨 및 쌀겨(259건), 폐지류(115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37건), 폐금속류(24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

\* 그 외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 식물성잔재물 13, 폐유리류 6, 무기성오니류 3, 분진류 3, 폐석고·폐석회 2, 폐목재류 1, 폐섬유류 1, 광재류 0, 폐사료 0(순환자원정보센터, '22.9.20 기준)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폐기물	용도	폐기물	용도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2. 탈황석고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사료 원료

\* 출처 :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2.6월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 건의내용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되는 경우 포함

- (2안) 유가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

- 유상거래 실적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 후 6개월 이내 실적을 제출허용
-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배출 등 환경 문제와 안전·보건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 또한 투자회사가 ESG 경영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SG에 소극적인 기업은 향후 투자 및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년 블랙록은 전년 대비 ESG경영에 대한 주주관여가 대폭 증가(환경(E) 289%, 사회(S) 146%, 지배구조(G) 46% 증가(삼정KPMG, 삼정 인사이트 Vol.74, '21.2월)

- 중견·중소기업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자본 등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조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

\*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37.6%), 공신력 있는 ESG 평가·공시 표준 마련(32.7%), ESG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20.8%)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견련, ESG 경영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1.6월)

-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ESG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컨설팅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책 필요

## □ 건의내용

- 환경·안전 등 ESG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제지원
  - ESG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중소 10%, 중견 7%, 대 3%
-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를 소비하는 경제주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3.7% 수준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 부담금 요율 : ('01년) 3.13% → ('02년) 4.591% → ('05년) 3.7%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4년 3.1조원에서 '21년 6.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3년에는 4.7조원에 이를 예정
- '14년 1.9조원이던 법정부담금은 '23년 약 2.6조원에 이를 전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및 재원규모>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획)
법정 부담금	19,471	21,440	20,354	20,396	21,107	21,830	22,229	22,591	20,082	25,894
재원 규모	30,828	35,986	35,051	35,879	33,275	38,168	49,696	63,940	62,324	46,961

\* 출처 : 전력기금사업단, 연도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계획

-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또한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
-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많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전기요금은 인상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은 인하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 건의내용

- 국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